

민선 5기 출범과 현안진단

이 용 | 대전일보 정치부 충남도팀장

1. 민선 5기의 충남도의 도정 방향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기치로 내건 안희정 충남지사의 민선 5기 충남도정은 크게 ‘안정’과 ‘변화’라는 두 가지의 과제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선 4기에 이어 지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면서도 이번 6·2지방선거에 투영된 민심을 민선 5기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변화,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면서도 안희정 충남지사의 도정 키워드인 ‘대화’, ‘소통’, ‘참여’를 바탕으로 다소 실험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도정의 패러다임을 선보이고 또 그것을 통해 시대의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산적한 현안의 돌파는 민선 5기 충남도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다. 도청신도시 조성사업, 2010세계대백제전 개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국방대 논산 이전,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2011년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등 줄줄이 대기 중인 대형 현안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안정적인 도정의 기틀을 유지해야 한다.

이들 현안은 민선 3기, 또는 민선 4기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것들로서, 전임 지사의 유산이면서도 새 도지사에게는 도전의 목표가 되고 전임 민선시대에 이어 다시 도민들로부터 도정 평가의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뒤따른다. 각종 현안 못지않게 안희정 충남지사의 새로운 정책·공약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민주정부 10년의 계승’이라는 스스로의 표현처럼 그 가치와 철학이 담긴 정책·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안희정식’ 도정의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민선 5기에 부여된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들을 살펴본다.

2. 민선 5기 충남도의 주요 현안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은 안희정 지사가 “가장 고민스러운 현안”이라고 토로할 정도로 민선 5기의 핵심 현안이다. 당장 내년도 국비 확보는 ‘발등의 불’이다. 도청신청사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277억원 가운데 270억원만 국비가 반영된 상태다. 나머지 2,057억원 중 내년도 예산으로 1,000억원이 확보돼야 한다. 또 예산 수탁사IC-도청신도시 간 진입도로로 총 사업비 1,077억원 중 51억원만 국비로 확보됐고 1,026억원이 추가 확보돼야 한다. 내년도에만 300억원이 국비에 반영돼야 한다.

이와 함께 우수 중·고교 및 대학 유치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연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 달부터 본격화되는 주택 및 상업용지 등의 일반 분양도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공주, 부여와 논산 등 일원에서 펼쳐지는 대백제전은 백제문화 세계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총 240억원이 투입되는 대백제전은 22개의 주요 프로그램과 70여개의 시·군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총 관람객 260만명(외국인 20만명 포함) 유치가 목표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내 최고의 역사·문화축제로서의 진수를 선보여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관람객 유치뿐만 아니라 입장권 판매, 직접 수익 확보, 교통·숙박·음식에 이르기까지 손님맞이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금산인삼엑스포는 국비 30억원과 지방비 105억원 등 총 135억원이 투입돼 내년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32일간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충남도는 유료 행사장인 주행사장은 81만명, 부대 행사장인 금산인삼축제장은 148만명 등 모두 229만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을 계획. 역시 관람객 유치와 수익 확보가 1차적인 과제이고 2006년 인삼엑스포 때와는 차별화된 운영도 필요하다. 특히 총 135억원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지만 직접 수익은 27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수익 확보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총 5개 지구(당진 송악지구, 아산 인주지구, 서산 지곡지구, 평택 포승지구, 화성 향남지구), 5,505만㎡에 총 사업비 7조4,458억원(국비 475억원, 지방비 4,779억원, 민자·외자 6조 9,204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환황해권의 새로운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남은 송악, 인주, 지곡지구 등 3개 지구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해외 자본의 투자처가 다변화되면서 사업시행자 선정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조원에 육박하는 투자 유치가 성패의 요인이다. 지난 달 29일에는 송악지구 사업자인 당진 테크노폴리스(주)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이 개발사업의 중단을 선언했고 해당지역 주민과 시민 사회단체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국방대 논산 이전의 경우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선 내년도에 1,066억원의 국비가 확보돼야 한다. 이와 연계해 국방과학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국책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경찰대, 경찰수사연수원, 한국중·서부발전 등의 공공 기관 이전도 초기에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 1조 2,577억원(국비 4,691억원, 지방비 5,387억원, 민자 2,499억원)이 투입되는 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공주·부여 역사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조기 추진,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의 본계약 체결에 이른 조기 착수 등도 중대 현안으로 꼽힌다.

또 서해안권 발전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의 2011년 착수, 주민들간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해법 도출, 논산지역의 기호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 등도 민선 5기의 대형 현안들이다.

이밖에 SOC분야에선 홍성 화양-경기 안산 원시간 서해선 복선(90.2km) 전철 조기 건설,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2011년 공사 착수, 당진-대산간 고속도로(24km) 조기 건설, 홍성 광천-경기 평택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66km) 내년도 실시설계 실시 등도 올해 정상 추진의 물꼬를 터야 한다. .

3. 민선 5기의 주요 정책 · 공약

민선 5기 충남도의 도정 방침은 ‘대화와 소통, 공정과 투명, 견제와 균형, 참여와 창의’다. 민선 5기의 정책 및 공약은 ‘분권’과 ‘참여’,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교육, 복지, 환경 등에 방침을 짚으면서도 자치행정의 주민참여 확대와 농수산 정책의 혁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경제는 ‘성장’보다는 ‘내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분야별 정책·공약을 보면 일반 행정분야에선 도민예산참여위원회와 도민이 참여하는 충남도감사위원회 구성,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할당제 도입이 눈에 띈다.

농수산분야는 농수산혁신위원회 구성과 초·중학교 무상 급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권역별 급식 지원센터 설립, 농어촌 혁신리더 육성 등이 제시됐다. 교육과 복지는 안 당선자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로 초·중학교 무상 급식 외에 충남교육혁신위원회 구성, 혁신형 행복학교 육성, 서울 학사 설립, 충남희망교육재단(가칭)과 충남복지재단 설립,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만 5세아 미만 아동 무상보육, 행복경로당 조성,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혁신적 내용의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문화체육분야는 211개 읍·면·동 역사문화 발굴 및 기록과 충남 문화길 조성, 충남문화재단 설립, 충남도민축구단 창단이 공약으로 확정됐고 산업·경제분야는 사회적 기업 육성, 충청자립 광역경제권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강소 펀드 조성 등 충청 경제권의 통합과 내실화에 역점을 뒀다. 건설·교통분야는 당진항 육성과 향만 전담부서 설치, 도청신도시 이전 지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민선 5기의 공약에서 두드러진 점은 각종 위원회의 신설이다. 각 분야별로 새롭게 설치되는 17개의 각종 재단과 위원회가 전략 수립과 실행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컨트럴 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4대강(금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전담하게 될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전문가 포럼’도 구성된다.

일반행정분야에선 도민예산참여위원회와 충남도감사위원회가 농·수산분야에선 농·수산혁신위원회가, 교육분야에선 충남 무상급식추진위원회와 충남교육혁신위원회, 충남희망교육재단이 각각 구성·설립된다. 복지분야에선 장애인정책위원회와 충남복지재단, 충남사회복지공제회가 각각 구성, 설립되고 문화·예술분야에선 전임 이완구 충남지사도 추진했던 충남문화재단의 설립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분야에선 외국인기업협의체와 대·중소기업 생생협력협의체,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각각 구성되고 녹색에너지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해 16개 시·도의 협력을 전제로 균형발전연구소 설립도 역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위원회는 각 실·국 등 기존 공조직과의 융합을 이뤄내는 한편 전문성은 물론 정책 수행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도 필요한 요소로 꼽힌다.